

“이란 전쟁 끝나면 나토 재검토”...탈퇴 카드 꺼내나

미국무, 이란전 협조 미진에 불만...“동맹은 상호이익” 이란과 협상엔 “협상·외교 선호하지만 실패 대비해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대이란 전쟁 종료후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미국에 비협조한 나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그는 특히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군 기지 주둔권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주둔

권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보통 때까지가 없는 유럽의 많은 지역을 포함해 세계 각 지역에 병력과 항공기, 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해준다”며 “우리가 방어해 주겠다고 약속한 스페인 같은 나토 회원국은 그들의 영공 사용을 거절하고 그걸 자랑한다. 그들의 기지 사용을 거부한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 그건 계속(나토에) 참여하면서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뒤 나토에 계속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거나 나토의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결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 작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개방될 것”이라며 “이란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상업 수로를 막지 않겠다고 동의하거나, 미국이 참여하는 전 세계 및 지역 국가 연합이 해협이 개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와중에도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협상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 밖에 모인 '노 킹스'(No Kings) 시위대.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율 33%로 집권2기 최저치”

매사추세츠대-유거브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對) 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사추세츠대 엠허스트 캠퍼스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20~25일 미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3.5%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44%, 지난해 7월 38%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이다.

이 대학의 타티세 은테타 정치학 교수는 “물가 급등, 주식시장 급락, 중동에서의 인기 없는 전쟁, 긴 공황 대기 줄을 초래한 섣달,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 시위 현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에서 타격을 받은 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분야별로도 대체로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의 경우 지난해 4월 33%에서 같은 해 7월 31%로 하락세였는데 이번엔 24%로 더 낮아졌다.

취업 정책의 경우 작년 4월 38%, 작년 7월 37%에서 이번엔 30%로 하락했고, 관세 정책도 지난해 7월 31%에서 28%로 내려갔다. 아울러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3%에 달했다.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 등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